

(통권 21-9호)

예산·재정정책 정보

본 보고서는 충청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l : 635-5205)

2021. 6. 1.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페이지
I. 경제	1. 2021년 3월 충청남도 경기종합지수	1
II. 재정	2. 충남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2
III. 정책	3.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관계인구 활용전략	3
	4. 농촌지역의 실거주인구 사례 조사 및 시사점 －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차이를 중심으로	5
	5. 지역유통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 도매시장 기능 재편 방안	7
	6.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 성과와 자치 분권 정책과제	9
IV. 법률 제·개정	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등12인)	11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등11인)	11

1. 2021년 3월 충청남도 경기종합지수

- 3월 충남의 동행종합지수는 108.9로 전월대비 0.3% 감소, 선행종합지수는 107.8로 전월대비 1.5% 증가
 -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5로 전월대비 0.1p 하락,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6.8로 전월대비 1.7p 상승
- 3월 충남의 동행종합지수는 비농가취업자수, 반도체 가격 상승과 자본재 수입이 증가한 수입액은 증가하였으나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출 감소와 소비 둔화, 산업생산 위축 등으로 전월대비 0.3% 감소한 108.9로 나타남
 -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순환변동치는 9.5로 전월대비 0.1p 하락
 - 주요지표 전월비를 보면, 수입액(1.8%), 비농가취업자수(0.2%)는 증가, 수출액(-3.3%),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1.2%), 산업생산지수(-0.7%), 판매전력량(-0.4%)은 감소
- 3월 충남의 선행종합지수는 제조업 구인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8개월 연속 자본재 수입액 증가, 비제조업자금사정실적 개선 등 고용과 기업투자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전월대비 1.5% 증가한 107.8을 나타냄.
 -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순환변동치 106.8로 전월대비 1.7p 상승
 - 주요지표 전월비를 보면, 신규구인인원(7.0%), 주가지수(2.7%), 비제조업자금사정실적(2.5%), 자본재수입액(1.6%), 반도체수출입물가비율(0.8%), 제조업재고순환지표(1.0%p)는 증가, 제조업중간재출하지수(-0.6%)는 감소

출처 : 충남연구원(충남경제, 2021. 5)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2. 충남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저출생, 고령화, 경제·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확대가 요구되어 왔고,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라는 미증유의 사회적 재난을 경험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 요구는 강해지고 있어 재정지출에 대한 효율적 의사결정이 점점 강하게 요구될 것
 -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충남의 재정지출 자료를 사용하여 부문별(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 지출이 GR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분석결과, 사회복지의 재정탄력성은 0.065로 충남의 사회복지재정지출은 충남의 GRDP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
 - 즉, 충남의 사회복지재정이 10% 증가하면 충남의 GRDP는 0.65% 정도 증가
 - 사회복지재정지출 변수의 산출탄력성 추정 값을 사용하여 도출된 2019년 기준 충남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승수는 1.41로 추정
 - 이는 사회복지 분야에 1원의 재정을 지출했을 때 충남의 소득이 1.41원만큼 창출 될 수 있음을 의미
 - 2020년 기준 추정된 충남 사회복지 재정승수는 1.29, 2021년 기준 추정된 재정승수는 1.14이며, 이를 통해 충남의 사회복지지출이 지금까지는 GRDP 성장에 기여해왔다고 할 수 있음
 - 단, 2022년 이후는 재정승수가 1미만으로 추정되어 효과가 반감 예상

출처 : 한국지방재정학회(춘계학술대회, 2021.3)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3.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관계인구 활용전략

○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지역인구정책 도입 필요

- 수도권 인구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10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2019년에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
- 2020년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 추진 규정 마련
-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이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 정책이며, 지역의 인구 유입 등을 목표로 하는 인구감소 극복 정책은 소수에 불과

○ 관계인구의 개념 및 유형

- 지역에 관계를 맺어오는 인구, 자신이 마음에 드는 지역에 주말마다 방문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을 응원하는 사람들
- 유형 : 관계심화형(연고형, 고향납세형), 관계창출형, 주변확대형

○ 관계인구 정책적용을 위한 관계인구의 조작적 정의 및 범위

〈표 3〉 국내 관계인구 정책유형 제시

구분	내용	내용	국내 유형
지역 연고자	• 인접지역 거주자 • 원거리 거주자	• 지역을 지원할 가능성 존재 • 정주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지역에 역할할 인재	• 출향 도민회
지역 무연고자	• 근무 경험자 • 자원봉사 경험자 • 여가생활 경험자	• 고향 출신자가 아니더라도, 한때 해당 지역에서 근무, 체재경험이 있는 관련자 • 비즈니스나 여가생활, 자원봉사 등으로 해당 지역을 다수 오고 간 지역 경험자	• 자원봉사자 • 지역 활동가 • 체류형 체험관광객 • 재방문 관광객

주 : 作野廣和□2019□이 제시한 관계인구의 양적·질적 유형을 한국의 여건에 맞게 연구자가 재정리

○ 한국의 관계인구정책 도입 예시

- 잠재적 관계인구집단 발굴 육성
 -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관계인구 정책대상 집단 발굴육성
 - 관계인구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정보플라자 구축 및 운영
- 지역 체류 관심 유도 및 확산
 - 장기간 체류하며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체류형 관계인구 유치 촉진
 - 지방이주 촉진을 위한 현지 살아가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생활관광 체험형, 농산어촌 체험형, 지역일자리 체험형)
- 지역 체류활동의 만족도 제고
 - 지역 체류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지역 이주 가능성 제고
 - 만족도 영향요인인 장기 숙박·체류시설의 품질제고 및 다양한 지역주체를 활용한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마련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정책브리프, 2021.5)

원문은 e-mail 첨부

4. 농촌지역의 실거주인구 사례 조사 및 시사점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차이를 중심으로)

- 농촌지역의 실제 거주인구가 주민등록인구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인구 차이의 연령별·지역별 특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실거주인구는 사례지역 전체로는 약 10%의 차이, 지역 안에서 최저 56.3~101.0%로 다양하여 세밀한 공간 단위의 조사 필요
 - 주민등록상 거주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차이는 사례지역 전체로는 9.7% 정도로 444명에 불과하나, 전국 농촌지역 면 소재지에 이 비율을 적용한다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주민등록 미등록 인구
 - 같은 면내에서도 행정리별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실거주인구가 최저 56.3%, 101.0%를 기록한 곳까지 다양한 비율로 분포,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여 농촌의 실거주인구를 추정하기보다는 더욱 세밀한 공간 단위로 조사 필요
- 실거주인구 조사 및 공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지자체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조사주체에 대한 기준수립 필요, 도시지역에서 활용되는 인구의 추정보다는 현장전문가 활용 효율
 - 데이터의 정밀도가 높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면 건물 데이터 등과 결합하여 실제 가구의 위치 수준으로 데이터구축도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디지털트윈 등을 위한 마이크로공간데이터

로 사용 가능

- 통신사의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적용하는 인구 추정 방법은 농촌에 쉽게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현지 이장단과 같이 실거주 인구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조사원을 활용, 현장 조사 효율
-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같은 면 안에서도 농촌중심지와의 거리에 따라 주민등록 대비 실거주인구 비율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다른 지역과의 비교나 확대 연구를 통해 공간 분포에 따른 실제 인구 추정 모델 개발 가능성을 확인함
-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개발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가 되는 거주인구를 조사 활용함으로써 지역 소멸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효과적인 사업 발굴, 적정한 사업 예산 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실거주인구의 연령규모에 대한 자료는 생활SOC 시설 공급과 운영에 있어 실제 수요에 부응한 재원의 투입, 프로그램의 선택과 집중에 활용 가능
- 농촌중심지에서 주민등록인구 대비 높은 실거주인구비율과 주변 지역에서의 낮은 실거주인구비율을 보이는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지역의 인프라 및 삶의 질 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공간정책 도출 필요

출처 : 국토연구원(연구보고서, 2021.3)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5. 지역유통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 도매시장 기능 재편 방안

- 지방 공영도매시장 중 일부 도매시장법인은 지역농산물을 취급하지 않고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경매 농산물 반입, 논란 발생
 - 농산물 지방 공영도매시장은 소수의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을 수집하고 중도매인이 판매하는 제한적 경쟁이므로 지역농산물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음
 - 그러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판매와 소비에 대한 절박한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와 같은 혁신적인 판매 방법도 나타남
 - 이처럼 지역농산물 순환체계 확립 방식은 푸드플랜 거버넌스를 비롯하여 지역 내 학교급식과 단체급식과 같은 주요 소비처를 잃은 생산자에게 큰 보탬이 되었음
 -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지방 도매시장은 정작 지역농산물 판매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해 이들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도매시장에 지역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도매시장법인 육성이 필요
 - 도매시장 기능이 쇠퇴한 지역에서는 푸드플랜 거버넌스(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도매시장법인으로 영업가능토록 허가 필요
- 2020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기존 규모화 방식에 의존하는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의 취급비중이 감소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판매, 드라이브 스루 등 지역농산물 판매 증가
 - 특히, 농산물 중앙 공영도매시장은 경매중심의 거래제도 변화

요구와 지방 공영도매시장의 지역농산물 취급 확대를 희망하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음

- 그러므로, 이미 유통환경 변화에 도매시장 기능이 쇠퇴하고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제도 완화, 지역농산물 취급 비영리법인의 도매시장법인 설립과 영업허가, 기존 도매시장법인과 연계방안을 시범 적용 필요
- 현재 푸드플랜 민간거버넌스 형태로 설립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실천적 유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유통 순환체계와 같이 지방 도매시장에 비영리법인 형태의 도매시장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거나 독립적인 유통 및 물류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세계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경험이 있는 국가의 지방 도매시장은 모두 기능이 쇠퇴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농산물 취급 특화 시장, 파머스마켓, 직거래 장터 등으로 변화
- 이때 지역사회의 식문화, 놀이문화 등과 결합하여 지역농산물 가치 향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계에 진입
- 국내의 다양한 유통경로 중 지방도매시장의 농산물 유통경로도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제도 개선과 유통 및 물류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쪽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유통경로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보고서, 2021.3)

원문은 e-mail 첨부

6.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 성과와 자치분권 정책과제

○ 전반적인 평가

- 지방정부 창의적, 적극적 행정과 지방정부 간 협력적 경쟁은 코로나대응과정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와 분권의 효용 확인
- 드라이브 스루, 착한 임대료 운동, 생활치료센터 등은 모두 지방정부 주도적으로 실천하여 중앙정부로 확산한 정책 사례들임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을 기초로 개학 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
- 지방정부 단위에서 기초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질병 관리청에 조치사항을 보고하는 선조치 후보고 체계로 전환
- 의료인력 및 병상 배분 등 자원관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 조치 등 지방정부 간 차별화된 정책, 한국형 방역모델

○ 성과요인

-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창의성, 적극성, 협력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간 협력, 감염병 전담 조직 및 인력 보강, 권한 이양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충족시켰을 때 지방정부의 협력 행정, 창의 행정, 적극 행정 강화

○ 한계요인

- 자원 및 정책 수단
 -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방정부가 자원(인적 및 물적)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메르스 이후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현장지

휘 감독권한은 여전히 부족함

- 확진자 동선 추적과 관련한 정보 공개 권한 및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에 대한 기능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 필요 제기
- 인프라 및 역량
 - 중앙정부의 질병관리청에 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배치된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간 대응 역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자치분권

- 자원, 정책 수단, 인프라 및 역량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창의·적극·협력 행정을 강화하고 입법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이후 지방행정의 정책과제 발굴은 지방자치제도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논의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제도 개선의 정책과제로는 중앙 지방 협력 강화,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 민간과의 협력 강화가 논의될 수 있음
-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의 정책과제로는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따른 지방조직 역량 강화, 지방정부의 감염병 대응권한 강화 등이 논의될 수 있음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정책브리프, 2021.4)

원문은 e-mail 첨부

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등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기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당시에는 중앙-지방이란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과 기초 간의 불합리한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음.
- 그러나 실제 재정분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히 지방이란 이름으로 광역과 기초를 포괄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
- 핵심적인 쟁점은 현재의 구조에서는 재정분권의 실행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반면에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양으로 인한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된다는 것임.
-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의 광역-기초간 재원분담에 대해 지방정부(광역-기초)간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함.
- 이에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역·기초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 시·도 비보조사업의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함(안 제27조의9 신설).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의원등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지원으로 어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하지만 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수입 수산물의 소비 증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의 기한을 당분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67조).

출처 : 국회의안시스템

원문은 e-mail에 첨부함